# 부끄러운 교통문화…이래서 손님맞이 하겠습니까?

D-32

## U대회 앞둔 광주 '교통문화지수' 낙제점
## 광주시 '배려운전 하기' 범시민운동 돌입
## 광주경찰 불법주정차 등 단속·캠페인 강화
##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절실

**광주 '2014 교통의식' 실태 보니**

- 교통사고 8167건
- 음주운전 적발 7959명
- 교통문화지수 전국 10위

**'배려운전 하기' 3대 실천과제**

- 방향지시등 켜기
- 정지선 지키기
- 무단횡단 안하기

전세계에서 2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수준 낮은 교통 문화로 자칫 극심한 혼잡 속에서 치러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검찰 등이 대대적 캠페인과 단속 등을 병행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로 드러난 광주 교통문화의 '민낯'=통계로 보는 광주의 교통문화 지수는 낙제점에 가깝다. 오죽하면 "건너는 길이 모두 횡단보도요, 멈추는 곳은 모두 주차장" 이라는 말에 공감을 표시하는 외지인들이 적지 않다. "운전하기 두렵다"는 말도 나온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167건. 101명이 숨지고 1만32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다.

낙후된 교통문화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 944건(1953명 사상) ▲신호위반 사고 994건(1759명 사상) ▲횡단보도 사고 197건(210명 사상)도 상당수다.

음주운전도 비슷하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만 무려 7959명. 하루 평균 최소 22명(21.8명)이나 된다.

후진적인 광주지역 교통문화는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에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광주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12위(73.7%)에 머물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차 차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은 울산·제주·경남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에 오를 정도로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 U대회를 찾는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전남 지역의 경우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

◇교통 캠페인·단속 돌입…시민 의식 개선 절실=당장, 광주 U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광주를 찾는데다, 국제대회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1일 광주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운전자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켜기 ▲보행자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또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간(낮) 전조등 켜기 범시민 생활화 캠페인도 병행, 국내외 방문객과 지역민의 교통문화 높이기 운동을 추진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통문화 개선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주차장 된 서석로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서석로가 주·정차 차량들로 휴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특히 서석로 4차로 중 2차로가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 교통 혼잡을 유발했지만 경찰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혁당 사건' 9명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이어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 동시선거 때 선물 돌린 하남농협 조합장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하남농협 조합장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에 조합원 600여명에게 10만원짜리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당시 이 농협 감사로 재직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박기웅기자 pboxer@

#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대신 징역형

##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징역 1년 이하 처벌

이른바 '보복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하면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케 했다. /연합뉴스

# 이장에 금품 제공 장흥군의원 항소심서 직위 유지

## 광주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흥군의회 김모(여·66)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 ~ 2년)을 벗어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형량보다 낮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약하고 선거범죄 유형도 '매수 및 이해유도'보다 '기부행위' 에 더 가깝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자서전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매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처벌가치가 낮고 건넨 현금 역시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B씨에 대한 후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장흥군 한 경로당에서 마을 이장에게 자신의 자서전 1권을 건네고 같은 해 5월 장흥군 한 카페에서 또 다른 이장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병원장에 금품 수수 심사평가원 직원 징역형 선고

## 감사 청탁 대가 500만원 받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지난 31일 의료보험급여 감사 대상 의원 원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여·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청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라고 준 돈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A의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장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장성군 한 의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던 지난 2009년 6월 22일 현지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장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내와 다투다 바다 빠진 남편 구조

쌍나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뛰어간 60대 남성이 어둠 속에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해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

○…지난 3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목포시 동명동 물량장에서 발을 헛디뎌 3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해 출동한 해경에 의해 8분만에 구조됐다는 것.

○…이날 술을 마신채 물량장에서 부인과 말다툼 중 돌연 뛰어가던 김씨는 어둠 속에 발을 헛디뎌 추락한 뒤 선박용 로프를 가까스로 붙잡고 떨어야 했는데, 해경 관계자는 "김씨는 다행히 별다른 증상이 없어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조치 후 가족에 인계됐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4타경 17860 | 1 | 화순군 화순읍 교리 70-1 공간아파트 102동 8층 908호 78.09㎡[임차인차인자는채무자겸소유자의자녀임] | 아파트 | 94,000,000 / 94,000,000 | 2014타경22084(중복) |
| 2014타경 27485 | 1 | 동구 산수동 401-22 4층 401호 40.96㎡ | 아파트 | 43,300,000 / 43,300,000 | 토지별도등기있음 |
| 2014타경 28730 | 1 | 남구 금당로3길8-3, 101동 1층 101호 [진월동,협진휘미리아파트] 84.99㎡ | 아파트 | 133,000,000 / 133,000,000 | 2014타경29580(중복)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 | | |
| 2014타경 23599 | 1 | 북구 두암동 284-7 113㎡ / 북구 방실로 182-7 59.85㎡ 부속건물 변소 0.9㎡ | 대 / 단독주택 | 79,558,250 / 79,558,250 | 일괄매각,2015타경1107(중복) |
| 2014타경 26444 | 1 | 남구 백운동 653-56 125㎡ / 남구 군분로10번길1-2 1층70.80㎡ 2층51.03㎡ 부속건물 변소 1.0㎡ 제시외 창고 등 23.5㎡ | 대 / 단독주택 | 103,796,390 / 103,796,39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김정숙,박용재지분각2분의1전부 |
| 2014타경 27249 | 1 | 북구 운흥동 975-2 185.2㎡ / 동소 1층94.83㎡ 2층85.77㎡ 일용품소매점 부속건물 변소 4.5㎡ 제시외 창고 등 13㎡ | 대 / 다가구주택 | 171,516,400 / 171,516,40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4타경 25106 | 1 |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산93 35405㎡ | 임야 | 42,486,000 / 42,486,000 | 분묘약20여기소재 |
| | 2 | 동소 산72 694㎡ | 임야 | 1,735,000 / 1,735,000 | |
| 2014타경 25403 | 1 |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09-20 216㎡[현황목전][공유자허재훈지분2분의1전부] / 동소 609-21 3564㎡[목록1과지분동일] | 전 / 전 | 48,924,000 / 48,924,000 |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 | | |
| 2014타경 27669 | 1 | 북구 평교로18번길50, 지하1층 40호 [우산동,우산동우미프라자아파트] 21.89㎡[공유자나정길지분3분의1전부] | 근린시설 | 5,000,000 / 5,000,0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illegible]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illegible]
2. 매각기일 : 2015. 6. 16.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6. 23.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illegible]
[illegible]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illegible]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illegible]
8. 주의사항
[illegible]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illegible]

2015. 6. 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